

환경보전이 곧 경제발전, 유럽 선진국들 민감한 대처

최도영

1953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81년 MBC에 입사하여 푸른신호등, 여성시대, 현장리포 마이크출동, 환경리포트 등을 담당했다. 현재는 MBC 라디오 '환경리포트' 담당 프로듀서이며 공해추방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민간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아젠다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삼림보전원칙, 기술이전문제, 재정문제 등에 관한 국가간의 협의가 몇차례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지 리우이후 큰변화라면 지구환경문제를 주도해나가길 바라는 미국의 정부가 부시행정부에서 클린턴 행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구환경문제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점차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환경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평화유지군(PKO) 파병문제로 미야자와(宮澤)수상이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불참하게되어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헤게모니(재원, 기술, 산업등)를 잡아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일본은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회복, 멸종위기의 동식물보호와 복원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는 100년 대계의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환경기본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전문 45조로 구성된 환경기본법은 국내 환경보존은 물론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 시야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3가지 기본이념은 "오늘의 환경문제는 지구환경이라는 시공간을 통해 미래세대에게도 그 영향을 준다는 인식하에 첫째, 환경이 주는 혜택의 향유와 계승, 둘째 환경에 대한 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사회구축등, 셋째 국제적 협조에 따른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 추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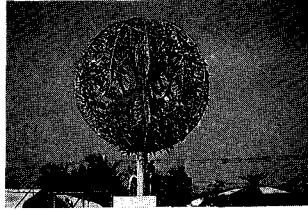
유럽의 선진국들은 주로 유럽공동체(EC)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

처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던 독일이 통독이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은 국내 문제가 안정되는대로 지구환경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유럽의 개별 국가들의 지구환경대책을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네델란드 3국은 지난 1991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로는 지구환경문제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럽의 선진국들이다.

이들 선진국들은 환경보전이 바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세계적인 흐름을(Trends)체대로 간파하고, 이를 국가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에너지세(Energy Tax), 유럽공동체의 탄소세(Carbon Tax), OECD의 환경세(Environmental Tax), 일본의 환경세(環境稅)등 시장가격 구조(Market



하늘에서 내려다본 플라멩고 공원
지난해 여기서 지구환경회의, 글로벌포럼이 열려 3만여명의 지구촌 환경가족들이 모여들었다.



플라멩고 공원에 설치된 생명의 나무
54의 전지구인이 지구를 보전하자는 염원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Mechanism)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선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련 세제는 각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환경개선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통산성과 경제계는 환경세가 일종의 소비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기후 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기체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선언적이고 일반적인 각국의 행동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아직은 규제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약가입국이 협약을 어겼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봤을 뿐이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공동체, OECD등 선진국에서는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세, 탄소세등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이 문제 또한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열대우림을 많이 갖고 있는 개도국 말레이시아는 이 협약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막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기후변화협약

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기술이전문제

현재 지구환경문제 대안에 있어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환경청정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기술이전과 협력의 개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많은 데다가, 개도국은 환경청정기술을 무상으로 조건없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은 기술이전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이전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방안과 지적소유권이 있는 기술의 이전방안 그리고 특허적, 양허적 이전문제가 최대의 현안문제로 부각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술이전에 관한 합의사항을 보면 정부나 정부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 기술은 이전을 촉진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은 지적소유권(IPR)의 보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의 일부로 개도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상업적인 이전을 촉진한다는 선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공공의 기술이든 개인기술이든 기술이전에는 어느 국가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개도국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구환경계획

현재 54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 중심의 다량생산과 다량소비는 자원고갈과 전세계적인 부(富)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개도국은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에너지소비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과 제 3세계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사용된 에너지가 기후변화와 산성비를 가져오고, 오존층파괴와 농약, 화학물질등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은 인류의 유일한 생존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지구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은 환경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과 역할분담 문제를 놓고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지구자원을 다량으로 소비해 공업화로 많은 부를 쌓은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의 제공과 재정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기존의 틀안(GEF)에서 개도국에 대한 재정과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으로 만족하지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은 규모와 범위의 확대개편을 주장하고 있



브라질 민간환경단체가 만든 푸른별 지구 공해로 헐떡이는 지구실태를 상징하고 있다.

다. 결국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주장대로 기존의 틀 안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관철되어 개도국은 그 주도권을 선진국에 빼앗긴 셈이 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EC, OECD 등 선진국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세/탄소세/에너지세를 부과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브라질 지구정상회담에서 재정문제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요쟁점사항은 지구환경기금이란 새로운 재정자금체계의 창설과 신규의 추가 재원문제, 책임분담문제, 정부개발원조(ODA), GEF 등의 재원확보 및 조성목표 등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주장대로 별도 재정체계 또는 금융체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기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은 환경기금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정부개발원조(ODA) 지원목표를 GNP의 0.7%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리우 이후의 지구환경문제

리우환경회의 이후(Post Rio)의 국제 환경문제는 우선 국제교역과의 연계가능성이 현충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문제,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화석연료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우환경회의 이후에도 우리 기업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해물질을 배출하면

서 마치 환경보전에 헌신하는 기업인 것처럼 광고나하는 저급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선진국의 기업들은 21세기에 대비해 환경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 즉 선진국 기업들은 “환경기준이 약하면 경제가 약해진다. 또는 환경기준이 떨어지면 경제도 침체된다”는 인식 아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환경기준의 강화는 제조업에 있어서 원가상승을 부추기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1%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정도의 비용은 경영합리화, 또는 기술개발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으며 환경기준을 지킬 때 기업이 얻는 무형의 이익, 즉 기업 이미지가 강화나 기업의 사회봉사등 보이지 않는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환경보전이 바로 시장보전이라는 시각에서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갖가지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저공해상품개발, 에너지효율향상, 리사이클링시스템 도입과 자원절약대책등 다양한 시장경제에 있어서 그린마케팅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아젠다 21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유엔환경개발회의의 효과적 후속조치보

장을 위하여 유엔헌장에 따라 설치하기로 합의되었던 지속개발위원회(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1992년 12월 22일 유엔총회에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6개국과 함께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앞으로 지속개발위원회는 환경과 개발을 통합차원에서 보면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감시와 규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반세기 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던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유엔공식기구로 환경과 개발을 중심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체화시키는 공식창구가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개발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체제가 조성되고 환경문제의 국제화와 정보교환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개발위원회가 앞으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속개발위원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재정지원문제, 기술이전문제등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이를 좁힐 수 있는 조정자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93년 2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지속개발위원회 발족회의에서는 53개 이사국을 선임하고 의장국으로 말레이시아를, 부의장국으로 캐나다, 체코, 튀니지를 선출하고 제 1

차 이사국회의를 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 1차 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회의에 상정되는 의제는 첫째, 지속개발위원회 5개년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아젠다 21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는 과제와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과제로 구분하여 재정지원, 기술이전등 아젠다 21의 시행에 따른 선·후진국간에 대립이 예상되는 5개 분야의 공통현사항은 “매년평가제”로 정하고 생물다양성보전, 유해폐기물관리 등 4개 분야는 “연차 및 장기평가과제”로 정했다.

매년 평가대상

- 지속가능성의 핵심요소
- 재원 및 재정체제
- 교육, 과학, 기술이전, 협력, 능력형성
- 정책결정 구조
- 주요 그룹의 역할

연차별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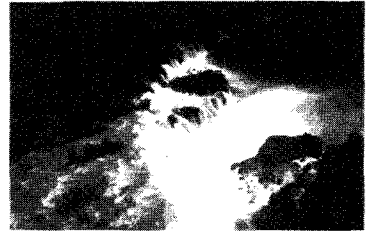
- 보건, 인간정주 및 담수보호
- 토지, 사막화, 삼림 및 생물다양성
- 대기, 해양
- 독성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둘째, 앞으로의 지속개발위원회의 기본운영방안을 보면 민간환경단체(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는 물론 유엔조직 외에서 활동하는 기구까지도 지속개발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앞으로 민간환경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젠다 21의 이행실태 평가일정에 대해서는 94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96년까지는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97년 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유엔 특별총회를 열 때 최종보고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넷째, 아젠다 21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각국간에 비교가능한 자료 확보방안을 찾고 구체적이고도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에 걸쳐있는 이파수폭포. 30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자연보호의식이 강한 세나라는 조그만 매점 두개 말고는 어떤 편의시설도 만들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

지속개발위원회는 1996년말까지 아젠다 21 전분야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후 97년에는 유엔 특별총회를 열어 아젠다 21의 개정과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농약정보**

농약은 4박천 살포일을 꼭 지켜 주십시오.

올바른 농약사용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밑바탕입니다.

농약은 많은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면 인체나 환경에 해를 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약사용시는 먼저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방제대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방제복·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혼용완제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농약전투량이 그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마지막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 사용해야만 잔류농약의 해가 없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의 농약병은 한국자원재활용공사에서 수거(개당 4원)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한 곳에 모아두어야 합니다.

농약공업협회